

전공의 수련제도와 병원신임위원회 개선방안



글 · 송건용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1. 쟁점 요약

전문의제도 및 전공의 수련교육제도는 안전한 의료와 의료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의료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정부나 전문단체에서 높지 않았다. 최초의 전문의제도는 개원의의 전문과목 표방허가제도로 시작했고, 이를 정부가 주관했다. 이 제도의 운영 기관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국립보건원에서 의협으로 전전하다가, 전공의 수련교육의 규모 증가 및 내실화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병협으로 이관되었다.

의료의 질에 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Kim's Plan과 전 국민의료보장제도 실시를 전공의 수련교육의 획기적 발전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계기는 오히려 병원에게 低賃金의 의사(전공의) 확보의 유인이 되었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도 전공의 수련교육은 수련병원의 비용으로 실시한다는 전통을 확립시켰다. 이와 같은 전통은 현행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관하고, 병원이 수련비용을 부담하고 의협 및 전문학회 대표가 약 2/3 참여하는 병원신임위원회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부+병협운영 전공의 교육수련제도의 확립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현행 정부+병협 운영형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응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이 운영형태의 변화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 다만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동료적(Collegial)평가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과정 및 절차의 개선을 통해 해결한다면 전반적인 타당성·공평성·투명성 등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문제는 수련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책정, 전공의 수련교육 등에 관한 절차상 문제로 귀결된다. 주관적 판단의 가능한 배제, 표준(standard) 및 조사방법의 개선, 병원신임위원회 조직의 공공성 제고 등의 관점에서 개선안이 제안될 수 있다.

■ 주관적 판단 소자의 제거

- 권한과 책임의 분산
 -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의 주요부분인 현지 및 서류심사에 있어서 병원신임위원회 위원과 현지 심사반 위원의 겸직을 억제한다.
 - 과정 및 절차에 관하여 세세하게 문서화하여 Manual/Guideline 등으로 발간·공개하고 준수한다.
- 표준설정의 합리화
 - 표준은 지켜야할 최소 기준이다. 따라서 모든 대상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킬 수 있는 표준을 설정하여 준수한다.
 - 다만 예외적 기준, 예컨대 전속전문의 수(N-n)의 전문과목별 차이, 중소병원에 적용되는 기준 완화 등에 관한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국가적 요구 또는 학회의 관심을 반영하든, 중소병원 육성이든 합의도출 과정을 거쳐서 예외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병원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병원 육성,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개원계약의사 (attending physician)의 수련교육 참여 및 전속 전문의 수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진행과정의 문서화
 - 병원신임위원회 및 산하 실무위원회, 그리고 현지 심사반의 심사과정 및 결과는 기록으로 정리 보존되어야 한다.
 - 특히 현지심사에서 수집된 수련병원 또는 수련부장의 complaints, 심의과정에서의 의견 불일치, 조건부 신임 등 관련자료는 문서화하여 후임 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준 및 조사방법의 개선

- 현실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현행 표준을 계속 개선한다.
- 표준의 문제지적, 현지 심사의 실시, 동 결과의 평가 등을 분담·실시하여 상호지원 및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 조직의 공공성 제고

- 병원신임위원회 위원에 현행 위원 외에 소비자, 간호사, 보험자, 전공의 등을 추가한다(소비자, 간호사, 보험자 대표는 병원신임위원으로, 전공의 대표는 수련병원 지정 위원의 역할을 함).
- 병원신임 대상병원을 수련병원 이외에 신설 병원, 의료기관서비스평가 대상병원, 산재 및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주기적 평가대상 등으로 확대한다.

- 신임결과의 혜택(merits) 범위를 정하여 신임 수요를 확대, 신임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시스템을 확립한다.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인식과 이의 실천은 재정지원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 의료의 질 향상은 의료의 전문화와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에 의하여 실현된다.
- 정부는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하여 재정지원, 의료보험수가의 조정 등 방법을 강구한다.

2. 정책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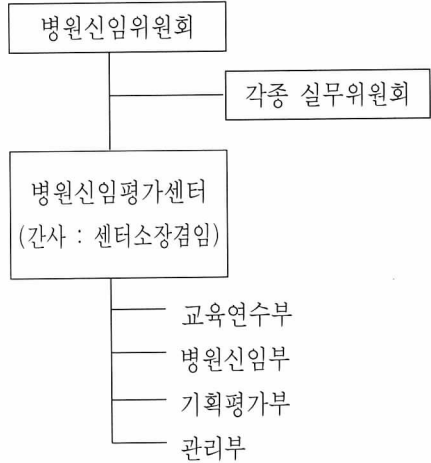
현행 **정부 + 병협** (병원신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교육제도의 추진구도를 계속 유지하고, 병원신임위원회는 병협의 산하조직으로서 병원신임과 전공의 수련교육의 신임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병원신임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개편>

■ 개편 방향

- 현행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및 정원책정 과정 및 절차상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어 병원신임위원회의 운영조직을 개편한다.
- ▶ 병협에서 병원신임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분리
- ▶ 독립채산제로 운영
- ▶ 신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사무국의 개편

■ 조직 개편



■ 병원신임위원회 개편

- 위원수: 현행 46인을 20인 내외로 축소, 위원은 병협, 의사협회 및 의학회 등 지명 위원(병원신임과 전공의 수련 겸임 위원) 소비자, 간호사, 보험자 대표(병원 신임위원) 전공의단체 추천 대표(전공의 수련교육위원) 등으로 구성
- 위원장: 현행과 동일(병협 회장, 당연직)
- 기능: 현행과 동일

■ 실무위원회 개편

- 병원신임실무위원회
 - 위원: 병원신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병협, 의협 추천 위원으로 구성
 - 기능: 병원신임 업무(조사 및 신임) 신임 대상 병원의 확대에 따라 기능을

강화함.

- 수련교육실무위원회
 - 위원: 병원신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병협 및 전문학회 추천위원으로 구성
 - 기능: 수련과정 인정, 수련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책정 등 조사
- 연구개발/평가 실무위원회의 신설
 - 위원: 병협, 전문학회 추천 연구자로 구성
 - 기능: 미국의 Strategic Initiatives, Monitoring 등 위원회 기능
- ▶ 병원 신임 및 전공의수련교육의 일반적 현안 검토, 심층 검토할 현안선정, 기준 및 신임 절차의 수정을 위한 건의 또는 position paper 작성
- ▶ 병원신임 및 수련교육 실무위원회의 실적 및 활동 평가

■ 사무국 개편

- 간사: 신임위원회 위원장 지명
- 병원신임평가센터(현행 협회내 교육수련부의 확대 개편) 설치 운영
- ▶ 교육수련부: 수련교육실무위원회 업무지원
현지실사반 참여
- ▶ 병원신임부: 병원신임실무위원회 기능지원
현지실사반 참여
- ▶ 기획평가부: 연구개발/평가 실무위원회 기능지원
- ▶ 관 리 부: 병원신임위원회 기능지원
신임위원회 행정지원

3. 기대효과

- 현행 **정부 + 병협** 추진 '전공의 수련교육제도'를 유지하면서, 시행절차의 개선 즉 병원신임위원회의 공익성 확대, 실무위원회 위원간 책임 및 권한분산, 방침·시행 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세한 명문화 등에 의거하여 전문영역별로 권한, 책임, 역할 등을 분산, 상호견제 및 협조 등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현행 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도 등은 크게 향상될 것임.
-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병원(수련병원)신임제도 및 동 위원회'는 우리나라 병원신임의 효시로서, 그간 축적된 know-how에 근거하여 신임 대상병원과 역할을 확대해 전체 병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계속 제공함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약점을 고려한 효율적인 병원신임 및 전공의 수련교육제도가 정착 가능하게 될 것임. ²⁰⁰